

## 북한의 시장화와 계층구조의 변화\*

김병로(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이 논문의 목적은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계층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시장경제 도입 이전 북한의 계층구조는 초기 사회주의 계급구조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쟁의 참여와 피해를 기준으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성분 중심의 계층구조는 시장화가 진행된 10~15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탈북자 면접조사를 토대로 볼 때, 북한 주민의 70~80%가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주민이 10% 정도로 추정되는 바, 북한 내 신흥자본가를 포함한 상인 집단이 새로운 사회계급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아직 사유화가 제한된 상황에서 상인계급은 국가기관과의 긴밀한 결탁을 통해 사용권과 운영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자본을 축적하고 있다. 새로 성장한 상인계급과 국가 관료집단 간에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며 대체로 공생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화폐개혁에서 드러났듯이 이들 간의 긴장과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전사자·피살자 출신 성분 가족에 대해 외화벌이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성분 중심의 기존 계층구조가 시장화로 충격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뿐 아니라 복잡 군중에 대한 북한의 정책 변화와 대외 교류 및 개방 확대로 인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전쟁의 피해 보상을 기준으로 서열화된 계층 질서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은 북한의 성분 구조를 와해시

\* 이 논문은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제번호: NRF-2010-361-A00017)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키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시장화의 결과로 기존 계층구조를 허무는 균열과 파열은 이미 진행 중이다.

주제어: 사회계층, 계층구조, 시장화, 상인계급, 신흥자본가, 성분 정책

## 1. 문제 제기

사회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와 질서는 계층구조에 잘 나타나 있다. 자본주의 체제가 자유와 경쟁의 이념적 토대 위에 형성되었다면 사회주의 체제는 평등과 계획이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마르크스-레닌주의 혁명 이념에 근거하여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차별을 없애고 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주와 자본가 등의 유산자 집단을 구(舊)자본주의 체제의 특권계층으로 간주하여 이들로부터 특권을 빼앗고 노동자와 농민, 군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함으로써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즉 혁명 과정과 국가 건설에 참여하여 구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킨 노동자와 군인, 지식인, 농민 등 다양한 세력에게 적절하게 보상하고 혁명의 주도세력에 대해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평등의 이념을 추구한다.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를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 체제로 규정하고 평등의 가치를 핵심적으로 내세운다. 그 핵심 기저에는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반동세력을 진압한 가운데 모든 집단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평등사회를 건설한다는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는 평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계급정책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물론 이러한 평등의

가치에 대한 강조는 상대적인 것이며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불평등은 여전히 존재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혁명 이전의 출신 성분과 계급에 의해 다양한 차별이 자행됨은 물론 간부와 인민 사이에 신분적·기능적 차별화가 발생하며 권력과 부, 위신 등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되지는 않는다.

계층이란 일반적으로 사회의 구성원들이 행사하는 권리나 기회, 그리고 그들이 향유하는 보상이나 특권에서 나타나는 차등화의 구조화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서로 다른 집단들 간의 구조화된 불평등이라 할 수 있다. 계급(class)이 ‘공통된 경제적 자원을 가진 사람들의 큰 집단’으로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socioeconomic status)와 유사한 의미로 정의되는 데 비해, 계층(strata)은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불평등 자원을 담아내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sup>1)</sup> 따라서 사회계층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자원을 가진 실제적 집단’으로서의 계급을 포함하는 포괄적·추상적 범주를 지칭한다. 상층, 중간층, 하층의 세 범주로 구분하는 계층 안에는 자본가, 사무원, 노동자, 관료, 상인 등 여러 계급이 포함된다.

그런데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평등의 가치는 대개 개혁·개방과 시장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근본적으로 훼손되기 시작한다.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정권과 체제 유지를 위한 방책으로 시장체제를 도입하게 된다. 시장의 도입은 평등을 핵심 가치로 작동하던 사회주의 체제에 계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국유 내지 협동 소유의 형태로 되어 있던 집단적 소유 방식을 새로운 사적 소유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

1) Lucile Duberman, *Social Inequality: Class and Caste in America*(New York: J. B. Lippincott Company, 1976), p. 56.

새로운 기업이 집단이 형성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현상이다.<sup>2)</sup> 이 새로운 집단의 형성은 필연적으로 기득권 집단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사회주의 체제전환 내지 체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층구조의 변화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으며 아직 일반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구체제의 기득권층이 신흥 부유층 및 기업이 형성에서 친화력을 가지는 한편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사회주의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공산당 기득권 계층이 개혁·개방의 제도적 기제를 적극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기존의 계층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고 지속된다.<sup>3)</sup>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시장화로 인해 계층구조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한 사회의 계층구조는 그 사회의 정치사회적 질서와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때, 사회계층의 변화는 그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와 질서가 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계층구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장의 도입에 따른 계층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시장체제 도입 이전의 북한 계층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먼저 북한의 계층 구성의 기본 구조를 재검토한 후, 시장제도의 도입으로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차례로 살펴본다.

---

2) 조한범, 『러시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서울: 통일연구원, 2005), 58~66쪽.

3) 위의 책, 59쪽.

## 2. 북한 사회계층에 대한 논의의 재검토

### 1) 기존의 연구 경향

북한 연구에서 계층구조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북한의 계층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개념은 아마도 ‘성분’일 것이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계급에 기초하여 계층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성분에 기초하여 사회적 진출과 정치활동을 하며 복지혜택이 차등화되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성분을 “사회계급적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사람들의 사회적 구분, 곧 사람들의 사상상 구성 성분으로서 어떤 계급이 사상상 영향을 많이 받았고 어떤 계급에서 사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출신과 직업, 사회생활의 경위에 의하여 사회 성원을 사회적 부류로 나눈 것”<sup>4)</sup>이라고 정의한다. 북한은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민의 성분을 크게 출신 성분과 사회 성분으로 나누어 평가한다.<sup>5)</sup> 출신 성분은 “태여날 때 가정이 처한 사회계급적 관계에 따라서 구분되는 성분”,<sup>6)</sup> 즉 본인이 출생할 당시 부모의 성분을 의미한다. 사회 성분이란 “본인이 직접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업 및 사회계급적 관계에 의하여 규정되는 성분”<sup>7)</sup>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신분 구분을 가리킨다. 그러나 문제는 이때 지칭하는 성분이 정작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

4)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 제1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762쪽.

5) 현성일, “북한 인사제도 연구”(미발표 논문), 6쪽.

6)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 제2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597쪽.

7)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 제1권, 1646쪽.

로 논의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기껏해야 1958년 12월 이후 몇 차례의 성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북한의 계층을 핵심 계층, 동요계층, 복잡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은 통일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통일교육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북한이해』는 1967년 4월부터 1970년 6월까지 주민재등록사업을 실시하여 출신 성분에 따라 3계층 51개 부류로 세분화해 제시한다.<sup>8)</sup> 이때 분류한 것으로 간주되는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이 북한 계층 연구의 기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군중, 기본 군중, 복잡 군중을 한국식으로 해석하여 붙여놓은 것이며, 북한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과는 적합성이 떨어지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정부출연 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은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의 3계층 51개 부류로 분류하여 관리해오던 성분 분류 사업을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 때문에 다시 실시하여 3계층 45개 부류로 재분류한 것으로 분석했다.<sup>9)</sup>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불법월경, 행방불명, 방랑, 도주 등 각종 범죄전력을 갖게 되면서 이를 고려한 성분 분류를 다시 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핵심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으로 재분류하고, 핵심계층에는 혁명가 가족, 영예군인, 접견자, 영웅·공로자, 제대군인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북한이 왜 성분 분류를 하였으며 성분 분류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가 무엇이었는가를 파고들어가 성분 정책의 요체를 정확히 드러내는 데는 미흡하였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계급’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연구도 있다. 북한은 사회구성원을 분류하는 개념으로 계층 대신

8)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1』(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245쪽.

9)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서울: 통일연구원, 2009), 330~331쪽.

노동자, 농민, 사무원, 인텔리 등의 계급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계급의 개념은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체제의 성격을 파악하거나 계층의 구성 변화를 분석하는 데 유리하다. 계급 개념은 초기 북한 사회의 이념적 지향을 담고 있는 담론으로 북한 사회주의를 해석하는 중요한 프레임이었다. 북한은 해방 후 “조선공산당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1945.10)에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반제·반봉건 민주혁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자를 핵심으로 하고 농민, 애국적 지식인, 양심적 민족자본가들이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 계급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계급정책을 “노동계급의 당이 계급노선에 기초하여 여러 계급과 계층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책”라고 정의한다.<sup>10)</sup> 김일성은 “사람들을 언제나 계급적 견지에서 평가하며 당의 계급노선에 철저히 서서 원수와 우리편을 엄격히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sup>11)</sup>라며 계급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론에 입각하여 노동계급을 사회주의 혁명의 핵심적 주력으로 규정하고 농민이나 인텔리, 중산계층을 혁명에 끌어들이 이끌고 나가도록 요구한다. 북한의 계급정책을 이해하고 내부의 계급 간 역동성을 파악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sup>12)</sup>

사회주의 계층구조를 분석한 콘라드(J. A. Konrad), 렌스키(G. Lenski), 질라스(Milovan Djilas) 등 여러 학자들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력이 새로운 계급(New Class)으로 등장하여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1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제1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779~780쪽.

11)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1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166쪽.

12) 김용기, “계급의 불평등구조와 계급정책,”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187~218쪽.

있다고 주장한다.<sup>13)</sup>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서재진<sup>14)</sup>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을 북한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북한에서도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력 집단이 새로운 지배계급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출신 성분에 의해 세습되는 핵심 지배계급은 국유화된 생산수단을 관리하는 자본가 역할을 하면서 폐쇄적인 특권계급을 형성했다고 분석한다.<sup>15)</sup> 서재진의 분석은 북한이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계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성분에 기초한 세 계층에서 핵심계층은 당원으로 대표되는 정치관료집단으로 보고, 노동자와 농민은 피지배계급으로 전락한 동요계층에 속하거나 반동분자로 공개 낙인찍힌 적대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는 그 나름대로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지만 북한 계층 구조의 속성을 충분히 드러내는 데는 미흡하다.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 계층 구분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고 당과 정권기관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신계급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장용석은 신지배집단으로 부상한 북한의 국가계급이 시장 기제를 활용하여 이

---

13) 사회주의 사회의 불평등의 원인과 양상에 대한 논의는 김병로·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6~20쪽 참조. 특히 질라스(M. Djilas)는 공산당 관료 중심의 ‘신계급(New Class)’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 독점 때문에 특권과 경제적 우위”를 지니는 특권계급으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한다. M. Djilas, *The New Class*(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62), p. 39.

14)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서울: 나남출판, 1995); 서재진, 『북한사회의 계급갈등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서재진, “북한사회의 계급구조와 계급갈등,” 『북한의 사회』(서울: 경인문화사, 2006).

15) 위의 글, 65~107쪽.

익을 추구하는 지배연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당·정·군 상층 엘리트 및 사회구조에 갈등과 균열을 만들어내는 역동적 측면을 분석하였다<sup>6)</sup>. 전현준·안인해·이우영<sup>17)</sup>, 이교덕·임순희·조정아·송정호<sup>18)</sup>와 같은 권력 엘리트 연구가 최고 권력자들의 학연과 지연, 혈연을 중심으로 형성된 특권계층의 성격을 잘 드러낸다. 그러나 시장경제활동이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주의 이념과 혁명성의 구조를 어떻게 부식시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데는 다소 미흡하였다.

이영훈<sup>19)</sup>, 이석<sup>20)</sup>, 임강택<sup>21)</sup>, 김병연·양문수<sup>22)</sup> 등 경제학자들은 2002년 7·1조치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화 실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들에 의하면 북한의 시장화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 정부가 이러한 사적 경제활동의 확산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미 북한 주민의 80%가 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영기관을 대신하는 개인위탁경영이 서비스 분야에서는 50%를 넘어섰고 무역회사는 40%, 제조업 분야에서는 2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sup>23)</sup> 물론 시장 활동에서 사적 자본을 축적하는 집단과 개인이 얼마나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는

---

16) 장용석, “북한사회의 빈부격차 실태,” 『북한주민통일의식과 북한사회변동: 2012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 발표』.

17) 전현준·안인해·이우영,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18)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7).

19) 이영훈,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서울: 금융경제연구원, 2007).

20) 이석 외,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서울: 통일연구원, 2009).

21)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9).

22)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23) 위의 책, 125쪽.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김병로<sup>24)</sup>는 시장화에 따라 새로 생겨나는 다양한 사적 경제활동이 빠르게 분화·확대되고 있으나 출신 성분으로 서열화된 북한의 계층구조를 균열시키는 정치적 영향력 형성이나 의식화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에 시장제도가 들어선 이후 달라진 계급분화와 새로운 상인계급의 등장에 관하여는 최봉대<sup>25)</sup>의 연구가 있다. 최봉대는 탈북자 20명을 심층 면접하여 북한 도시 주민의 계층 이동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주민들은 가족이나 친척의 권력을 동원하여 일종의 특혜를 받아 시장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고, 학연이나 지연을 이용해 뇌물을 제공하고 시장기제에 접근하여 이익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혈연적 혹은 비혈연적 연결망 자원을 동원하여 경제적으로 상향 이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혈연적 연결망 자원이 강력할수록 사적 부문의 시장경제활동을 통해 개인재산을 증식하여 경제적 상승에 진입할 가능성이 더 높다. 나아가 시장화와 더불어 계층구조의 분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신분체계의 상승에 속하는 권력집단과의 결탁관계가 아니고서는 경제적 계층 상승을 구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적 계층 분화가 정치적 신분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북한의 정치적 신분 구조를 지탱하는 이념과 혁명성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

24) 김병로, “경제조치 이후 북한의 사회적 변화,” 윤영관·양운철,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계획에서 시장으로?』(서울: 한울, 2007).

25) 최봉대, “계층구조와 주민의식 변화,”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서울: 한국방송공사, 2005); 최봉대,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개별 가구의 비공식적인 연결망자원의 계층화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서울: 한울, 2008).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전쟁의 피해의식과 감성을 지속적으로 재 생산하고 있는 북한의 기본 계층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그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 2) “계급에서 성분으로”: 변형된 북한의 계층구조

북한의 초기 계급노선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질적인 변화를 겪으며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한다. 즉 전통적인 사회주의 계급에 따라 구성원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주민을 분류한 것이다. 한국전쟁은 양적으로 방대한 전사자·피살자, 영예군인, 월남자 가족 등을 양산하면서 북한의 가족 구조와 사회구조에 지각변동을 초래했다. 김병로<sup>26)</sup>의 연구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계층구조가 기존의 계급 중심에서 전쟁의 피해 보상을 중심으로 계급정책이 바뀌었음을 주장한다. 실로 전쟁은 계급구조의 파괴를 통해 사회를 재구성하는 힘을 갖고 있다. 전쟁이 국가발전과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브루스 포터(Bruce D. Porter)가 잘 지적한다.<sup>27)</sup> 북한의 경우에도 전쟁의 사회 재구성 효과는 매우 컸다. 한국전쟁으로 북한이 입은 인적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밝히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로 볼 때 120~130만 명 정도일 것으로 판단된다.<sup>28)</sup> 이는 남한의 인적 손실 85만 명을 넘는 규모이며, 당시 북한 전체 인구의

---

26) 김병로·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 김병로, “한국전쟁의 인적 손실과 북한 계급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9권 제1호 (2000).

27) Bruce D. Porter, *War and the Rise of the State: The Military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s*(New York: The Free Press, 1994), pp. 11~20.

28) 김병로, “한국전쟁의 인적 손실과 북한 계급정책의 변화,” 219~242쪽.

12~14%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였다. 당시 남한 인구의 절반도 안 되었던 북한의 인구수를 감안하면 북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가족 구조를 와해시키면서 사회 재편의 필요성을 야기했음을 알 수 있다.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하면 북한 인구의 약 30%인 300만 명이나 된다.<sup>29)</sup> 인구의 3분의 1이 전쟁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다. 만약 사망자와 부상자의 가족을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북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부상자에 대해 생계를 보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전쟁의 피해자가 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전사자·피살자 가족을 사회의 핵심 세력으로 등용시키면서 계층구조를 재정비하였다. 북한이 1958년 8월 사회주의 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고 그해 12월부터 전체 주민을 출신 성분별로 구분하는 주민등록사업을 추진한 핵심적인 동기는 바로 한국전쟁의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새로운 계급정책을 펴기 위한 것이었다. 즉 북한은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전쟁 가담 정도와 성격, 피해자, 월남자 등으로 구체적인 성분 분류 작업을 실시하였다. 기존의 항일혁명가 가족 이외에 체제의 핵심 군중으로 등용할 전사자·피살자 가족을 파악하고 영예군인에 대한 대책을 세우며 체제 반동분자로서의 월남자 가족을 분류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피해자들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이른바 ‘북한식 보훈정책’을 추진함으로써

---

29) 『통일조선신문』은 182만 명의 부상자가 생겨났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Toitsu Chosen Shimbun*, June 27, 1970; Young Whan Kihl,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Regimes in Contest*(Boulder, CO: Westview Press, 1984), p. 42에서 재인용.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대한 의지와 집념을 고취시켜 나가는 한편, 월남자 가족에 대해서는 정치적·사회적 제제를 가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해나갔다.

북한은 성분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혁명가와 전사자·피살자 유자녀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사회적 혜택을 제공했다. 김일성은 혁명학원을 졸업한 유자녀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대학교육기관의 설립을 지시하는 한편, 중앙당과 지방당에 유자녀과를 신설하여 이들을 직업혁명가로 양성하는 정책적 조치를 취하였다.<sup>30)</sup> 이른바 ‘전쟁고아’들을 위한 초등학교를 여러 곳에 설치하였으며, 만경대 혁명유자녀 학원, 강반석 혁명유자녀학원, 해주혁명유자녀학원, 남포혁명유자녀학원 등 각 도별로 혁명유자녀학원을 설립하고 이들을 사회주의 제도에 흡수하였다.<sup>31)</sup> 그런가 하면 영예군인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시설과 산업체를 배치하여 기본 군중의 중심 세력으로 포섭하였다.<sup>32)</sup> 반면에 수십만의 월남자 가족에 대해서는 ‘조국을 위해 싸우지 않고 남조선으로 도주한 반동분자’로 규정하고 정치적·사회적 차별을 가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한국전쟁을 계기로 북한에는 심각한 규모의 결손가족이 발생했고 북한 당국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정책과 계급정책을 추진해야만 했다. 전통적 가족관계의 해체와 결손가족의 증가는 국가 책임의 증대로 이어졌고 ‘전 주민의 노동자화’라는 이데올로기적 레토릭(rhetoric)에도 불구하고 한국전

3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284쪽.

31) 김일성, “혁명가유자녀들을 직업적 혁명가로 키우자,” 『김일성저작집』, 제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393~407쪽.

3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조선전사』, 285쪽.

쟁의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사회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하였다. 계층구조가 ‘계급에서 성분으로’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시장화로 인해 북한의 계층구조가 변화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한국전쟁의 피해자를 우대하는 성분 중심의 기본 질서가 시장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갈등과 균열을 겪으며 달라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 3. 시장화의 진전과 북한 계층구조의 분화

#### 1) 사적 경제활동의 확산

북한이 2002년 7·1조치로 시장을 제도화한 것은 그야말로 획기적인 일이었다. 농산물 위주의 기존 농민시장에다 공산품과 수입상품까지 거래를 허용하고 암시장을 통합하여 종합시장을 제도화한 것이다. 2001년 1월 중국 상해를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이 변화한 상해의 모습을 ‘천지개벽’이라 표현하며 북한도 경제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고를 할 것을 주문했다. 김정일의 이러한 ‘신사고’에 입각하여 2001년 10월 ‘경제관리개선방침’을 구체화하고 2002년 7·1개혁을 단행한 후, 2003년 5월 종합시장 운영에 관한 내각 지시에 의해 전국에 300개가량의 종합시장을 설치했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가격을 자유화하고 유통 부문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다. 소매유통기관이 합법적으로 수매 위탁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개인이 생산한 물품을 위탁받아 시장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은 물론 국영기업소, 협동단체들도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 및 판매

할 수 있게 이용 범위를 확대했고, 기관·기업소에 대한 현금 유통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다.<sup>33)</sup> 이러한 모든 제도화 조치는 시장의 작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이며 그 결과 경제관리, 가격·임금·재정, 생산 부문, 유통 부문, 무역 등의 영역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sup>34)</sup>

이와 같은 시장화 조치로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 공간이 확장되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탈북자 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사의 경험이 있는 탈북자가 지난 5년 동안 56.8%(2008년) → 66.7%(2009년) → 71.6%(2011년) → 69.2%(2012년)로 꾸준히 증가하였다.<sup>35)</sup> 탈북자의 약 70%가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 가운데 시장이나 장마당에서 장사나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80%라는 응답과 90%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80%라는 응답은 30.7%(2008년) → 29.2%(2009년) → 21.4%(2011년) → 30.0%(2012년)으로 많아졌고, 90% 이상이라는 응답은 같은 기간에 27.7% → 20.3% → 32.1% → 26.2%

33) 박재규,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개정증보판)』(과주: 법문사, 2007), 459~464쪽. 운송의 경우에도 개인이 지방인민위원회와 계약을 맺어 자산의 처분권과 이익 수취권을 갖는 방법으로 운송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석 외,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177쪽.

34) 김영윤,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6), 78~115쪽.

35)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08년부터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주민 의식조사’를 연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8년과 2009년 샘플은 각각 하나원 교육생 296명(2008.7.24), 370명(2009.10.15~16)이었으며, 2010년에는 하나원 사정으로 조사하지 못했다. 2011년부터는 조사방법을 바꾸어 북한을 탈출한 지 1년 6개월 미만의 국내입국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스노우볼 샘플링 방식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의 표본 크기는 각각 114명(2011년 4~6월 조사), 127명(2012년 4~6월 조사)이다. ‘북한주민의식조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북한주민통일의식과 북한사회변동: 2012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 발표』(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자료집, 2012.8.29.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참조.

<표 1> 탈북자의 장사 경험 유무(2012)

단위: 명(%)

장사 경험 유무	노동자	농민	사무원	전문가 (교원, 의사, 기술자)	학생	군인	외화 별이 일군	장사	가정 부인	무직 및 기타	계
있다	33 (70.2)	6 (54.5)	3 (50.0)	6 (66.7)	3 (37.5)	1 (25.0)	2 (66.7)	15 (100)	14 (93.3)	5 (55.6)	90 (69.2)
없다	14 (29.8)	5 (45.5)	3 (50.0)	3 (33.3)	5 (62.5)	3 (75.0)	1 (33.3)	0 (0)	1 (6.7)	4 (44.4)	39 (30.0)
계	47	11	6	9	8	4	3	15	15	9	129 (100)

p=0.001

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노동자, 농민, 사무원, 전문가, 학생, 군인 등 직업을 막론하고 대부분 부업 형태로 장사를 하고 있다. 직업 군별로는 장사 유무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났으나, 연도별로 상반되는 트렌드가 나와 정확한 해석을 하기에는 곤란하다. 2012년에는 농민과 학생, 군인은 장사 경험이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왔는데, 2011년에는 농민과 학생, 군인도 장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노동자가 오히려 장사 경험이 없다고 답하여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가정주부는 2011년에 11명 중 모두 장사를 했고 2012년에는 15명 중 14명이 장사 경험이 있다는 일관성 있는 응답을 하여 대부분 장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상인계급이 등장하는기를 알아보기 위해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았다. 서울대학교 2012년 조사에 의하면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전체 조사 대상자 130명 중 15명으로 11.5%를 차지하였다. 2011년에는 총 102명의 응답자 가운데 11명이 장사를 전업으로 하였다고 응답하여 10.8%를 기록했다.

탈북자 샘플이 북한 주민의 인구사회학적 구성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탈북자 샘플을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북한 주민의 약 10%가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새로운 상인계급으로 자리 잡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적 경제활동이 정치적 신분과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장사 경험의 유무가 당원과 비당원의 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2012년 조사 대상자 총 106명 가운데 당원이 11명, 후보당원이 1명, 비당원이 94명이었는데, 장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당원 가운데 63.6%(7명), 비당원 가운데는 71.7%(76명)로 전체의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다. 북한에서 당원이 직접 장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으나 그러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장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중에는 당원이 전혀 없었다. 2011년에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11명 모두 비당원이었으며 2012년에는 15명이 모두 비당원이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북한의 기존 정치적 계층구조에서 특권을 차지하고 있는 당원은 장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인계급으로 직접 진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국가는 시장경제를 관리·통제하는 권력을 행사하며 상인집단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사적 이익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사적 경제활동을 통해 재산을 어느 정도 축적하는가? 서울대학교 2012년 조사에서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가구 생활비는 3,000원 미만이 60.9%를 차지한 반면, 필요한 생활비의 대부분을 장사와 개인 사업 등 부업(더벌이)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나 부업으로 벌어들인 총수입은 1만 원 미만은 32.4%, 1~10만 원이 15.2%, 10~30만 원이 30.5%, 30~50만 원 8.6%, 50만 원~100만 원이 8.6%, 100만 원 이상이 4.8%를 각각 차지했다. 장사나 부업에 의한 직업별

가구 소득은 사무원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노동자, 전문가, 가정부인, 장사, 농민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의 지난 5년간 탈북자 면접 조사에서 ‘고난의 행군’ 시기와 비교할 때 2012년의 생활수준이 향상된 사람들과 더 나빠진 사람들의 비율이 각각 50.9%, 49.1%로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최근 2~3년 사이에 소득에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화가 사회계층의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36)</sup>

조사 대상 주민들이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일거리는 소매장사로 36.8%였다. 그다음으로 도매업인 되거리장사(도매)나 외화벌이 계통이 각각 10.4%를 차지하였으며 돈장사도 6.6%를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소매나 개인편의봉사, 샅벌이 등 소규모 시장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45%이며, 되거리장사(도매)와 개인임가공, 식당 및 상점운영, 돈장사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시장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약 20%를 차지하였다. 22.6%를 차지한 기타는 중국과의 거래(밀수 등), 소토지 농사, 운전, 밀수업, 자기 것을 봄에 미리 주고 가을에 몇 배로 받는 것 등이었다.<sup>37)</sup> 직업별로 소매장사가 차지한 비중의 크기는 장사, 가정부인, 농민, 전문가, 노동자의 순이었으며 되거리장사의 경우 장사, 가정부인, 노동자가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부인이나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소매장사 위주의 시장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모두 비당원으로 정치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주로 소규모 장사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6) 김병로, “북한주민의 대남인식과 북한사회 변화실태,” 『북한주민통일의식과 북한사회변동: 2012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 발표』, 52~54쪽.

37) 장용석, “북한사회의 빈부격차 실태”.

<표 2> 북한에 거주할 당시 가장 많은 수입을 얻은 일거리

일거리 종류	빈도(명)	응답 비율(%)
소매장사	39	36.8
개인편의봉사	5	4.7
개인입가공	2	1.9
식당, 상점입대운영	2	1.9
되거리장사	11	10.4
외화벌이 계통	11	10.4
돈장사	7	6.6
샅벌이	4	3.8
해외과전노력	1	0.9
기타	24	22.6

## 2) 사유화의 확대와 상인계급의 형성

7·1경제조치는 북한 경제의 사유화(privatization)를 촉진시켰다. 북한은 이미 1998년 헌법개정 시 법적으로 사유화 범위를 조정하였다. 즉 협동소유의 범위에서 고기배, 부림집승, 농기구·농기계는 협동소유, 건물 같은 것 등을 제외한 것이다.<sup>38)</sup>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생산수단으로 규정했던 부림집승과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이 이제 더는 생산수단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고기배와 부림집승, 농기구, 건물 등은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현재 개인집은 건축과 매매가 허용되지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는 공식 매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용권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살림집이나 아파트도 개인소유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sup>39)</sup> 1차 산업 중 어업 분야는 개인

38) 1998년 9월 5일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22조 협동소유의 대상으로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북한과 수산업 무역을 하는 조선족 상인의 설명에 의하면, 북한에서 어업 분야는 바다에서 고기를 직접 잡아 올리는 ‘원천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개인이라고 한다.<sup>40)</sup> 개인이 생산 장비가 있고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기배를 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증거다. 물론 이러한 활동은 여전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에서도 소상공 생산경제 요소가 발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해볼 수 있다.<sup>41)</sup>

사유화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조건에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확보하는 ‘운영권’은 실질적인 소유권 역할을 한다. 국영 상점이나 국가 소유의 식당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인데 소유는 국가에게 있지만 운영은 개인이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임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부실한 국영상업망을 무역회사에 넘겨주어 운영하도록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시하였다. 2003년 5월 5일의 종합시장 운영에 관한 내각 지시 문건을 보면, “무역성, 상업성, 도 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들은 지금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영 상점들을 임시로 상품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무역회사들에 넘겨주어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sup>42)</sup>라며 해당 기관들은 상품을 확보할 수 있는 무역회사

---

39) 북한인 KD씨 인터뷰, 2007.9, 중국 단둥 시. 북한의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실의 박사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개인이 얼마든지 소유할 수도 있고 증여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러나 그 자동차를 가지고 장사를 하여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생산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2005.9.21~23,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국제고려학회에서 북한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의 한석봉·안천훈 박사의 해석.

40) 조선족 사업가 K씨 인터뷰, 2007.9.

41)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변화』(서울: 통일부, 2004), 68~73쪽.

42) 박재규,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개정증보판)』, 463쪽.

를 선정하여 상점을 하나씩 맡아 운영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했다. 한 개의 무역회사가 단독으로 맡아 운영하기 힘든 평양제1백화점 같은 곳은 각 층별로 여러 무역회사에 임대하여 수입상품을 판매하거나 위탁판매하도록 조치하였다. 지방에서는 돈주들이 ‘국영 상점’을 임대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흔하다.<sup>43)</sup> 국영상업망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 회사나 공장의 마당에다 들여 놓고 파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거대한 외화벌이를 주관하는 사람은 당이나 군대, 단체의 외화벌이 기관 명의를 빌어서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이 장사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영화는 사유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sup>44)</sup>

이러한 개인 사업가들은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당과 국가보위부 등 국가 권력기관은 물론 무역성, 상업성, 체육성 등 내각 산하 각 기관들은 자체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직접 생산과 유통활동에 참여한다. 산하에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무역을 하는가 하면 중국과의 합작 형태로 음식점과 문화산업 등에 진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인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돈이 없으므로 개인이 소유의 자본을 동원하여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묘책으로 시장 기제를 활용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 사업이 공식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나 단체나 기관의 명의를 빌려 개인이 회사를 운영한다.<sup>45)</sup> 김병연·양문수<sup>46)</sup>의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북한은 제조업의 20%, 무역의 40%, 서비

---

43) 탈북자 KR씨 인터뷰, 2007.9.1. 국영 상점은 1개 동마다 있거나 2~3개 동에 1개씩 있는데 식료품, 공업품, 농산물, 물고기 상점 등 4개의 상점이 기본이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국영 상점에 들어와 있는 조금 찌그러진 중고제품을 사다가 자기가 고쳐서 시장에 내다 판매한다.

44)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변화』, 73~75쪽.

45) 조선족 사업가 J씨 인터뷰, 2007.10.29, 중국 연길 시.

46)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스업의 50%를 개인위탁경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위탁경영의 형태는 최근 몇 년간 큰 변화 없이 지속되는 것으로 평가하는데, 개인위탁경영과 같은 기준에 형성된 사적 경제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계층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적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새로운 상인계급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인가? 서울대학교의 2011년과 2012년의 탈북자 조사에 의하면 총 응답자 가운데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각각 10.8%, 11.5%였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북한 주민의 약 10%가 새로운 상인계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로운 상인계급의 규모를 10%로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닌 것은 2007년 북한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북한의 내부 통신원이 전하는 자료에 의하면, 권력자들을 포함하여 시장체제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북한 사회의 부유층을 7%로 추정하고 있다.<sup>47)</sup> 이러한 경험적 자료들을 통해 볼 때 시장체제의 등장으로 북한에 약 10%의 새로운 상인계급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3) 신흥자본가의 성장

그렇다면 상인계급 가운데 신흥자본가는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가? 새로운 상인계급의 전형적인 집단인 집단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매대를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종합시장에 매대를 갖고 장사를

---

47) 2007년 북한에서 조사한 비사회주의 현상과의 투쟁 통계에 따른 것으로 이는 2007년 10월 시장억제 조치 이전 자료이며 아시아프레스 내부팀이 취재하였다. 편집부, “또 다시 내 휘두르는 전국적 시장 억제,” 『림진강』, 제2호(2008.3), 81쪽.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규모가 있는 상인들이라 할 수 있다. 2007년의 경우 평안남도 순천의 금산동시장에서는 보통 2,000~3,000명씩 장사를 했고 평성의 중화시장에서는 5,000명 정도의 주민이 장사를 하였다. 상인으로 활약하는 집단 가운데는 북한 내 6,000명 정도로 추산되는 화교가 단연 우선이다. 화교들 가운데 유력한 상인이 많은 이유는 중국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특수한 신분 때문이다.

장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주로 중간층과 하층민이며 기득권 상층이나 ‘핵심 군중’에 속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장사를 직접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sup>48)</sup> 앞서 살펴보았던 서울대학교 탈북자 조사에서 탈북자 가운데 당원으로서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이를 확인해준다. 즉 2011년과 2012년에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은 각각 11명과 15명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비당원이었다. 당원으로서 장사를 했다는 사람은 있지만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기존 정치적 계층구조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당원은 장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이다. 당관료나 군 간부들은 시장기제를 관리·통제하는 권력을 행사하며 상인계급으로부터 사적 이익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한다.

상인계급 가운데 대규모의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을 신흥자본가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큰 시장이 형성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른바 ‘돈주’로 불리는 신흥자본가 집단이 성장한 것이다. 과거 국가가 상품을 장악하고 통제하던 시기에는 화폐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으나, 7·1조치 이후 “공짜는 없다”라는 원칙하에 화폐를 매개로 하는 교환 경제가 자리를 잡았고 화폐가 새로운 생산수단으로 등장했다. 새로운

---

48) 탈북자 KR씨 인터뷰, 2007.9.1.

자본가 집단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된다. 즉 장사를 전업으로 하여 출세한 ‘장사꾼’이 있는가 하면, 국가기관의 외화벌이꾼이나 당 비자금 관리자가 유력한 돈주로 꼽힌다. 전자는 자생형 돈주로, 후자는 권력형 돈주로 분류할 수 있다.<sup>49)</sup> 자생형 돈주는 대개 지방에서 시장을 통해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이며 재산 규모가 적게는 5,000~1만 달러, 많게는 3만~5만 달러에 이른다.<sup>50)</sup> 권력형 돈주는 해외 거주자, 해외 교포, 중앙당, 외화벌이기관 간부 등 세 그룹으로 나뉘며 북한의 당, 정, 군 권력기관의 비호를 받거나 결탁관계를 유지하며 사업을 한다. 권력형 돈주는 자생형 돈주와는 달리 처음부터 군부나 당 등 권력기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외화벌이에 직접 참여하면서 전문적으로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신흥자본가 집단은 북한에서 직접 정치를 하거나 관료는 아니지만 권력자와의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재산권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권력을 행사한다.

신흥자본가 집단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성장했는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최근 북한의 중앙당 간부강연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을 보면 신흥자본가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강연회의 강사로 나선 장용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오면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하는가 하면 백만장자, 억만장자 ‘돈주’들이 생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했다고 지적하였다.<sup>51)</sup> ‘고

49) “북한의 부자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조사자료(2010.8), <http://blog.daum.net/kjw77/13755708>.

50) 북한인 KD씨 인터뷰, 2007.9, 중국 단둥 시. 2007년의 경우 일본에서 수입하는 중고 냉동기나 한국전자제품을 판매하는 5만 달러(북한돈 1억 5,000만 원 정도) 규모의 ‘돈주’들도 있는데 대개는 3만 달러(북한돈 1억 원, 한화 3,000만 원) 정도를 갖고 장사를 한다고 한다.

난의 행군' 이후 최근 15년 사이에 시장 활동을 통해 재산을 축적한 새로운 자본가 집단이 생겨난 것이다. 개인위탁경영 형태의 실질적인 사유화가 진행되면서 장사로 돈을 번 신흥부유 '자본'계급이 형성되고 있다. '돈주'로 지칭되는 일종의 자본가 집단이 형성되고 이들이 상호 교류하면서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생활세계를 구축하고 있다.<sup>52)</sup> 신흥자본가 집단은 고급 가전제품에 관심을 갖고 자녀 교육에 관한 정보도 교환하면서 서로 소통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 4. 계층갈등 양상과 구조적 변화

##### 1) 계층 질서의 위기와 화폐개혁, 그리고 성분배려조치

시장화의 확대 결과 북한의 기존의 계층 질서에 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2009년 단행한 화폐개혁에서 엿볼 수 있다.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장사로 돈을 번 상인계급이 생겨났고, 이를 바라보는 주민들 사이에 박탈감과 불만이 생겨나 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

51) “그런데 사회에는 ‘고난의 행군’을 지나오면서 일심단결의 이반현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인민들이 돈맛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끼그끼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장마당에 나가 앉아 있는 사람들을 엄두에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 돈주라는 자들이 빠져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 한 3~4년 전까지만 해도 백만장자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억 단위로 나갔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노동계급입니까…… 거기다가 사람이 돈맛을 들이면 자연히 사상적인 변질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인민, 누가 인민인가. 반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인민입니다. 사상적인 변질이 온 자들, 인민에도 속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못 치는가. 배급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못 칩니다.” 장용순, 중앙당강연회 녹취내용(2007.7).

52) 이우영,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서울: 한울, 2008), 170쪽.

화폐개혁을 단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특히 사회의 기득권 상층은 상인계급의 성장에 상당한 불만과 박탈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시장 활동이 기존의 계층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전쟁의 피해자 가족이 기득권을 차지했던 계층구조에서 새로운 상인계급이 경제적 부를 축적함으로써 정당성의 위기(legitimation crisis)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화폐개혁을 통해 ‘부당하게’ 부를 축적한 상인들의 재산을 박탈하고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킴으로써 주민과 기득권 세력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런 점에서 2009년 11월의 화폐개혁은 경제적 개혁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집단으로 부상한 신흥자본가를 축출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sup>53)</sup>

2009년의 화폐개혁으로 기존의 상인계급과 신흥자본가 집단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장사를 전문으로 하는 상인계급과 신흥자본가 사이에도 적지 않은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상인들과 일부 돈주들이 큰 손해를 보고 하층민으로 떨어진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일정의 공산품이나 식량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시장에서 새로운 주도권을 쥐게 되는 현상도 생겨났다. 돈을 빌려 주며 사채업으로 부를 축적하던 많은 ‘돈주’들이 뒷전에 밀려나고 상품을 대량으로 소유한 상인들 가운데 신

---

53) 탈북자 LJE 인터뷰, 2013.1.16. 화폐개혁 당시 주민들에게 선전하기를 “장사하며 돈을 번 사람들은 국제사회가 지원한 물품을 팔아 돈을 벌었다. 원래 그 물품들은 빈민층에 돌아가야 하는데, 장사꾼들이 돈을 내놓지 않으니 국가가 그 돈을 거둬들여 일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나누어 줘야 한다”라는 논리를 내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을 포함하여 주민 1인당 500원씩 나누어 주었다. 당시 화폐의 가격은 쌀과 고기 등 생필품을 충분히 구입하고 남는 돈이었다고 한다. 남한과 국제사회가 제공한 지원 물품이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홍자본가로 부상한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sup>54)</sup> 실제로 화폐개혁 직후 공산품이나 식량을 가진 상인들은 새로 분배받은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러 온 주민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으려고 군대와 인민보안부를 동원하여 물건을 지켰다고 한다.<sup>55)</sup> 상인계급과 신흥자본가의 이러한 몰락과 부상은 시장화의 결과가 기존 계층 질서와 성분 구조를 교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화로 인해 성분 중심의 기존 계층구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북한 당국이 김정은 정권 등장 직후인 2012년에 전사자·피살자 출신 성분 가족에게 외화벌이의 기회를 집중적으로 배려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점이다.<sup>56)</sup> 이러한 사실은 KBS의 중국 현지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북한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하던 전사자·피살자 출신 성분 가족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강하게 갖게 되었음을 드러낸다. 시장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전사자·피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배려를 통해 기득권층의 불만을 해소하는 묘책을 강구한 것이다. 2006년 11월 당시 북한의 권력집단을 구성하는 간부들의 출신 성분을 보면, 여전히 전사자·피살자 가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분 중심의 기존 계층구조가 양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sup>57)</sup> 그러나 전사자·피살자 출신가

---

54) “새로운 시장 ‘돈주’ 출현과 직장 탐색”(NK지식인연대, 2009.12.18), <http://cafe.daum.net/nkic/1VVj/122?docid=688462823&q=%BA%CF%C7%D1%C0%C7%20%B5%B7%C1%D6&re=1>.

55) 탈북자 LJE 인터뷰, 2013.1.16.

56) 중국에서 북한 주민 100명을 심층 인터뷰한 KBS 공용철 피디, “2012 북한의 정치사회 변동과 김정은 체제 전망,” 『북한주민통일의식과 북한사회변동: 2012 북한이탈주민 조사결과 발표』(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12.8.29.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129~130쪽.

57) 2006년 11월 현재 당 간부의 출신 성분은 혁명가 1.8%, 혁명학원 10.8%, 전사

족에 대해 경제적 배려를 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을 볼 때 북한의  
기득권 상층을 공고히 형성하고 있는 전사자·피살자 집단이 시장화의  
혜택으로부터 심각하게 소외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최근의 이러한 성분배려조치는 김정은 정권이 군부 중심의 권력 구  
조를 당 중심의 구조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사자와 피살자, 혁명학원 출신 성분을 이념으로 삼고 있는 당  
과 국가보위부 쪽으로 시장의 경제적 혜택을 돌리려는 정책전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화가 선군정치와 동시에 진행되면서  
시장화의 혜택이 전사자·피살자 출신 성분이 많은 당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돌아갔다는 사실과도 맞물려 있다. 일부 당 간부들은 신흥부유층  
과 결탁하여 돈주로 성장하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군부가 외화벌  
이를 독점함으로써 당관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새로운 상인계급과 돈주가 시장의 유력한 수혜자가  
됨으로써 전사자·피살자 출신 성분이 우대받는 사회질서가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전사자·피살자 출신 성분을 우대하는 당의 정체  
성이 흔들리게 되었고 계층구조 자체의 정체성에 위기가 발생한 것이  
다. 이처럼 흔들리는 계층구조의 질서를 막아보려는 차원에서 기득권  
상층을 형성하는 전쟁의 피해자 가족에 대해 특별 배려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시장화의 결과가 북한의 성분 구조를 전면적으  
로 바꾸는 상황은 아니지만, 기존의 출신 성분으로 형성된 계층구조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하고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자·피살자 37.7% 등으로 전쟁 피해자들이 50%가량을 차지한다. 국가보위부  
간부들도 혁명가 0.1%, 혁명학원 0.1%, 전사자·피살자 82.3% 등이며, 군부에는  
혁명학원 1.2%, 전사자·피살자 25.8%, 인민보안성에는 혁명가 및 혁명학원  
0.02%, 전사자·피살자 14.5% 등이다.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 간부사업편람』  
(2006).

## 2) 국가 관료집단과 신흥자본가의 협력 및 갈등

그렇다면 국가 관료집단은 시장화 과정에서 새로운 상인계급이나 신흥자본가 집단으로 탈바꿈하고 있는가? 제1장의 논의에서 대체로 사회주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공산당 기득권 집단이 개혁·개방의 제도적 기제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독점함으로써 기존의 계층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북한의 경우는 어떤가? 북한의 시장화는 2002년 7·1조치로 종합시장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이미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1995년부터 지역별 자력갱생을 위한 분절화된 형태로 진행되었다.<sup>58)</sup> 중앙정부가 국가공급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당과 내각, 군대의 거의 모든 기관이 기관의 자체적 운영과 구성원들의 생존을 위해 생산, 유통, 무역 등 모든 부문에서 자력갱생을 위한 외화벌이 획득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 외화벌이 사업은 당의 주요 기관과 내각의 주요 부서 및 지역 단위별로 조직된 외화벌이 사업소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은 국가계획위원회가 큰 그림을 그리고 무역성이 총괄 지휘한다. 즉 내각이 외화벌이의 공식 창구가 된다는 의미다. 북한은 내각의 각 성이나 위원회, 도 행정기관이 무역회사를 두고 각 부문별·지방별 수출입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른바 대외무역의 분권화라는 명분으로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관이 무역을 담당한다. 내각의 각 부서는 모두 무역회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이러한 무역회사가 수천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sup>59)</sup> 국가계획위원회는 무역기관들의 수입 품목과 수

---

58) 김병로, “북한의 분절화된 시장화와 정치사회적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제 16권 제1호(2012), 93~121쪽.

59)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149쪽.

량, 가격 등 ‘외꾸’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무역과 유통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며 상인계급과 결탁한다.

국가기관은 물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자원은 사적 자본을 가진 개인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국가기관과 신흥자본가 사이에 결탁이 이루어진다. 물론 그 이권을 배분하는 권리를 국가가 장악하고 있고 무역이나 외화벌이 사업 및 수입된 상품유통 과정에서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관료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 또 단속과 검열의 권한을 이용하여 묵인하거나 봐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확보한다. 이러한 모든 기획이 국가로부터 시작되고 관리된다는 점에서 국가는 권력을 갖고 있지만, 자원과 자본이 절대적으로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권을 신흥자본가에게 주지 않을 수 없고 신흥자본가들의 시장 활동과 그로부터 확보된 자본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중앙정부의 재정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한 중국과는 달리 북한은 국가가 개입할 재화와 자원이 부족하여 개인 무역업자와 사설 운송업체와 결탁하는 관계를 맺고 이들에게 이권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유통시장에 개입한다. 물론 국가의 묵인이나 부분적인 합법화에도 시장 활동에서 여전히 비합법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러한 현실을 활용하여 신흥자본가들에 대한 권력을 행사한다.<sup>60)</sup> 그러나 시장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흥자본가 집단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통제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신흥자본가 집단은 국가 관료집단 간에 발생하는 갈등의 틈 사이에서 생존력을 키운다. 사실 시장화로 인한 갈등은 국가 관료와 신흥자본가의 관계가 아니라 내각과 당, 당과 군부 등 국가기관 간에 발생하

---

60) 임강택,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제2경제와 계획경제(제1경제)의 관계성 연구,” 『KDI 북한경제리뷰』(2009.10), 12~14쪽.

는 경우가 더 많다. 시장이나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기관은 내각이지만 당 중심체제로 운영되는 북한에서 외화벌이나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과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당이다. 당은 산하에 직접 공장과 기업소,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체의 당 경제를 운영한다. 내각과 군대를 정치적으로 지도하는 권한을 가진 노동당은 방대한 전국적 조직망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산하에 120여 개의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노동당 38호실과 39호실의 외화벌이 사업은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결재하며 어느 국가기관에서도 손을 대지 못하는 성역으로 간주된다. 그런가 하면 군부는 인민무력부를 필두로 각종 국책사업을 주도하고 농장과 철도, 공장, 기업소를 내각으로부터 이전받아 직접 운영하면서 선군정치를 한 지난 15년 동안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sup>61)</sup> 이들 군부 무역회사는 개인업자들과 결탁하여 개인업자는 자금을 동원하고 인력을 고용하며 수출 실무를 수행하는 대신 일정액을 해당 군부대에 지불하고 나머지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을 취하였다.<sup>62)</sup> 신흥자본가들은 방대한 국가기관들 사이에 드러난 갈등의 틈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가 관료집단이 북한에서도 신흥자본가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가는 신중히 따져 보아야 한다. 내각과 당, 군부의 관료집단이 무역회사나 외화벌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며 자본을 축적하고 있는 것이 지배적인 현실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2000년대 후반 반시장적 조치와 화폐개혁 등을 둘러싸고 당과 내각의 갈등이 치

61)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제1호(2011), 224쪽.

62) 선군정치의 최고 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는 회사의 이사들과 같은 형태로 꾸려지며 국방위원회 위원들 각자가 하나의 거대한 외화벌이 회사를 갖고 있는 물주들이라 할 수 있다. 탈북자 HJS, CJY 2010년 1월 29일 면접.

열했던 점을 보아도 국가관료가 유력한 이익집단임을 보여준다.<sup>63)</sup> 또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군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당의 위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경제기구를 조정하는 현상을 보아도 관료집단의 영향력이 크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sup>64)</sup> 이런 측면에서 국가 관료집단이 가장 규모와 파급력이 큰 시장세력임은 분명하다.<sup>65)</sup> 그럼에도 자본 부족으로 국가 관료집단이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유통과 서비스, 무역과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신흥자본가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당과 군대, 보위부 등 주요 권력집단에 아직은 전사자·피살자 출신 성분자의 다수가 포진되어 있어 큰 틀에서 보면 시장화는 북한의 기존 계층구조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국가 관료 간, 그리고 국가 관료들과 신흥자본가 집단 간의 협력과 갈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분으로 구조화된 기존의 계층 질서와 마찰을 빚고 있다.

---

63) 2000년 10월에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로 시작된 내각의 경제팀이 2002년 7·1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 설치 등 시장화 개혁을 주도하였으나, 내각의 경제팀이 당의 재정권한을 가져가려고 한 데 대해 당이 반발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했다. 로동당에 계획재정부가 신설되고 박남기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이 부장으로 임명되어 이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시작되었고, 당 주도의 화폐개혁과 시장철폐 조치로 결말이 났다.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2009)”(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12).

64) 김정일 위원장 장례 당시 운구차를 호위했던 4명의 군부 실세 중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3월)과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7월), 김정각 인민무력부장(11월)이 해임되거나 교체되었고 국방위원회 산하의 대공투자그룹을 해체하여 내각의 합영투자위원회로 귀속시켰다. 『연합뉴스』, 2013년 2월 1일; Tony Namkung, “North Korea at a Crossroads: the Google Visit”(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34차 통일정책포럼, 2013.1.18).

65) 홍민, “북한경제 연구에 대한 위상학적 검토: 수평경제와 시장세력을 중심으로,” 『KDI북한경제리뷰』, 1월호(2012), 59쪽.

### 3) 대외 교류·개방과 계층구조의 침식

시장화로 인한 북한 계층구조의 변화는 생산수단의 사유화에서만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 교류와 개방의 측면도 크다. 사실 시장에 참여하여 하층민이나 ‘복잡 군중’이 신분을 상승시킨 경우는 있으나 전반적인 계층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그 효과는 크지 않다. ‘복잡 군중’과 하층민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없어서 큰 사업을 하지 못하며 주로 비사회주의로 금지된 장사를 하는 등 소상인으로 활동하며 신분상승을 꾀한다. 정치사회적 진출이 막혀 있는 ‘복잡 군중’에게는 그나마 시장 활동이 유일한 생존수단이기 때문에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화가 ‘복잡 군중’의 계층 변화에 미치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대외 교류와 개방의 결과가 낳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복잡 군중 가운데 가장 수적으로 가장 많은 집단 역시 월남자 가족, 치안대 가담자, 부역자 등 한국전쟁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월남자는 한국전쟁 이전 월남자와 한국전쟁 기간 중 월남자로 구분된다. 지주, 자본가, 종교인 등 전쟁 이전 월남자도 적대분자들이지만 전쟁 중 월남자는 주민들이 전쟁으로 고생하던 시기에 ‘사회주의 조국을 버리고 떠난 반혁명분자’ 혹은 ‘반동분자’들로 낙인찍혀 사회적으로 엄중한 차별을 받았다. 그런데 시장화와 함께 진행되는 대외 교류와 개방의 확대로 미국과 일본, 중국의 친인척 방문자가 증가하고, ‘반동분자’로 낙인찍혀 있는 복잡 군중 가족의 신분을 상승시킴으로써 계층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북한에서 전사자, 피살자 가족으로 분류되어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 중에 뒤늦게 월남자 가족으로 판명이 난다면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 과정에서 북측

가족 중 일부는 남한에 가족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 배경에는 북한의 가족이 월남한 가족에 대해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오지만, 사실은 북한의 가족이 이 사실을 인정할 경우 그동안 전사자, 피살자 가족으로 북한에서 받았던 정치적·사회적 혜택과 특권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 상봉정책을 “기본 균중뿐만 아니라 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 경위가 복잡한 균중도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로 보고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는”<sup>66)</sup> 광폭정치, 인덕정치의 소산이라고 합리화한다 하더라도 월남자들은 “우리사회주의 제도에 대해 악의를 품고 남으로 달아난 악질 반동분자들”<sup>67)</sup>이라며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군 포로나 월남자 가족과의 교류와 지원은 북한의 계층 질서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는 일이다.

서울대학교의 조사 대상 탈북자들은 남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비율이 59.6%로 매우 높았다. 2008년과 2009년 조사의 응답자들의 약 30%와 40%가 남한에 친척이 있다고 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 조사에서는 56%, 62.3%로 각각 응답하였다.<sup>68)</sup> 남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다는 탈북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기획 탈북과 같이 먼저 온 탈북자들이 가족을 빼내오는 경우가 많지만, 국군 포로나 월남자 가족·친척을 찾아오는 탈북자도 적지 않다. 미국과 일본, 남한에 가족·친지를 둔 북한의 월남자 가족은 해외의 가족·친지와와의 교류를 통해

66) 『로동신문』, 1993년 1월 28일.

67) 『연합뉴스』, 1999년 8월 2일.

68)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통일의식과 북한사회변동: 2012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발표』.

신분상승의 기회를 갖게 된다. 실제로 남한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외  
 부로부터 친인척이 방문하여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북한의 가족  
 이 주변으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  
 은 북한의 계층구조에 심대한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북한은 한국전쟁의 피해 정도에 따라 서열화한 성분  
 구조를 중시하여 전쟁 시기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고 도망간 ‘반동분  
 자’로 여기는 월남자 가족에 대해 정치적·사회적 차별을 가하였다.  
 그러나 남한이나 미국, 일본에 친척을 둔 월남자 가족이 친척들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사회경제적 신분을 상승함으로써 혁명과 전쟁의 이념  
 에 기초하는 북한의 성분 중심의 계층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  
 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장화와 함께 맞물려 진행되는 개방과 교류  
 가 북한의 계층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시장화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계층구조가 어떻게 변화하  
 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시장체제를 도입하기 이전 북한의 계층구조  
 는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계급에서 성분으로’ 질적인 변화를 겪었다.  
 모든 집단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평등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프롤레  
 타리아 독재를 실현하겠다는 북한 정권은 한국전쟁 이후 전쟁의 피해  
 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북한식 보훈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전쟁의 참여와 피해를 기준으로 계층구조가 재편되었다. 이러한 계층  
 구조가 지난 10~15년 동안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변화를 겪고 있다.  
 주민의 80%가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시장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 규모도 커서 시장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 탈북자의 70%가 장사를 한 경험이 있고 장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10% 정도이며 지속적 성장 추세인 점으로 미루어볼 때, 북한 내 신흥자본가를 포함한 상인집단이 새로운 사회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아직 사유화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인계급은 국가기관과의 긴밀한 결탁을 통해 사용권과 운영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며 자본을 축적하고 있다.

새로 성장한 상인계급과 국가 관료집단 간에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며 대체로 공생적 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최근 화폐개혁에서 드러났듯이 이들 간의 긴장과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한 긴장과 갈등은 시장화를 둘러싼 내각과 당, 군부 등 국가 관료들 간의 이익 다툼으로 더욱 촉진되고 있다. 내각과 당, 당과 군부 관료들 사이에 이익 갈등으로 다툼이 벌어지는 동안 국가기관의 대리인 내지 위탁경영을 담당한 상인계급은 관료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다. 그런가 하면, 국가기관의 관료들은 대부분 시장화의 경제적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전사자·피살자 출신 성분 가족에 대해 외화벌이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성분 중심의 기존 계층구조가 시장화로 충격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주의 체제의 신계급으로서 국가 관료는 북한에서도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고 시장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외화벌이에 직접 참여하거나 통제와 배분의 권한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공산당 기득권 상층이 개혁·개방의 제도적 기제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독점했듯이 넓게 보면 북한의 기존 계층구조도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돈이 없고 상인과 돈주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서 신흥자본가를 포함한 상인계급의 경제적·정

치적·사회적 영향력은 확대되었다. 그런가 하면 계층구조의 변화는 복잡 군중에 대한 북한의 정책 변화와 대외 교류 및 개방 확대로 인해 아래로부터도 진행되고 있다. 월남자 가족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분상승을 하는 것은 혁명과 전쟁의 이념에 기초한 북한의 성분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전쟁의 피해를 기준으로 서열화된 계층 질서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직은 북한의 성분 구조를 와해시키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기존 계층구조를 허무는 균열과 파열은 이미 진행 중이다.

앞으로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하면 이러한 계층구조의 균열은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서는 개혁·개방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흥부유층과 사업가가 생겨나고 빈부 격차가 벌어지자 이러한 불평등 현상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시도로서 ‘선부론’을 제시하였다. 북한이 아직까지 이러한 이론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새롭게 형성된 신흥자본가와 상인계급이 기존의 사회주의 계층 질서와 신념을 무너뜨릴만 한 위협요인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러나 기존 계층구조와의 마찰과 침식이 진행 중이며 향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유권의 허용과 개방정책으로 나아간다면 시장화의 이익을 선점하기 위한 사회적 갈등과 계층구조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초래될 것이다.

■ 접수: 2월 12일 / 수정: 3월 23일 / 채택: 3월 26일

## 참고문헌

### 1. 북한 자료

#### 1) 단행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전서』, 제1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_\_\_\_\_, 『조선전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1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 대사전』, 제1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_\_\_\_\_, 『조선말 대사전』, 제2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2) 논문

편집부, “또 다시 내 휘두르는 전국적 시장 억제,” 『립진강』, 제2호(2008.3).

#### 3) 기타 자료

『로동신문』, 1993년 1월 28일.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 간부사업편람』(2006).

### 2. 국내 자료

#### 1) 단행본

김병로·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서울: 민족통일 연구원, 1998).

김병연·양문수,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서울: 통일연구원, 2011).

김영운,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6).

박재규, 『새로운 북한읽기를 위하여(개정증보판)』(과주: 법문사, 2007).

박형중·조한범·장용석,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서울: 통일연

- 구원, 2009).
-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변화』(서울: 통일부, 2004).
- \_\_\_\_\_, 『북한사회의 계급갈등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 \_\_\_\_\_, 『또 하나의 북한사회』(서울: 나남출판, 1995).
- 이석 외,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이승훈·홍두승,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비공식 부문의 대두와 계층구조 변화』(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이영훈,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서울: 금융경제연구원, 2007).
-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임강택,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전현준·안인혜·이우영,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정영태 외, 『북한의 부문별 조직 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당·정·군 및 경제·사회부문 기간조직 내의 당 기관 실태를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조한범, 『러시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서울: 통일연구원, 2005).
-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1』(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1).
- \_\_\_\_\_, 『2009 북한개요』(서울: 통일연구원, 2009).

## 2) 논문

- 김병로, “북한의 분절화된 시장화와 정치사회적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제1호(2012).
- \_\_\_\_\_, “경제조치 이후 북한의 사회적 변화,” 윤영관·양운철,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와 사회: 계획에서 시장으로?』(서울: 한울, 2007).
- \_\_\_\_\_, “한국전쟁의 인적 손실과 북한 계급정책의 변화,” 『통일정책연구』, 제9권 제1호(2000).
- 김용기, “계급의 불평등구조와 계급정책,”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7).
- 박승민·배진영, “북한사회안전부 주민등록사업참고서,” 『월간조선』, 7월호(2007).

-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제1호(2011).
- 서재진, “북한사회의 계급구조와 계급갈등,” 『북한의 사회』(서울: 경인문화사, 2006).
- 이영환, “북한 체제의 특성과 인권문제의 근원,” 『북한이탈주민의 이해』(서울: 그리스도대학교 남북통합지원센터, 2009).
- 이우영, “2000년대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 특징과 전망,” 『KDI 북한경제리뷰』, 제13권 제11호(2011.11).
- 임강택,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제2경제와 계획경제(제1경제)의 관계성 연구,” 『KDI 북한경제리뷰』(2009.10).
- 장용석, “북한사회의 빈부격차 실태,” 『북한주민통일의식과 북한사회변동: 2012 북한이탈주민 조사 결과 발표』.
- 정우권, “1990년대 북한 주민생활보장제도와 도시 계층구조 재편,” 『현대북한연구』, 제7권 제2호(2004).
- 최대석·박희진, “비사회주의적 행위유형으로 본 북한사회 변화,” 『통일문제연구』, 제23권 제2호(2011).
- 최봉대, “계층구조와 주민의식 변화,”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서울: 한국방송공사, 2005).
- \_\_\_\_\_, “북한 도시 사적 부문의 시장화와 도시가구의 경제적 계층분화: 개별 가구의 비공식적인 연결망자원의 계층화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서울: 한울, 2008).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2009)”(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12).
- 홍 민, “북한경제 연구에 대한 위상학적 검토: 수령경제와 시장세력을 중심으로,” 『KDI북한경제리뷰』, 1월호(2012).

### 3) 기타 자료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통일의식과 북한사회변동: 2012 북한이탈주민 조사결과 발표』(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12. 8.29.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북한의 부자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조사자료(2010.8),

<http://blog.daum.net/kjw77/13755708>.

Tony Namkung, “North Korea at a Crossroads: the Google Visit”(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제34차 통일정책포럼, 2013.1.18).

현성일, “북한 인사제도 연구”(미발표 논문).

『연합뉴스』, 2013년 2월 1일.

『연합뉴스』, 1999년 8월 2일.

### 3. 국외 자료

Duberman, Lucile, *Social Inequality: Class and Caste in America*(New York: J. B.

Lippincott Company, 1976).

M. Djilas, *The New Class*(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62).

Porter, Bruce D., *War and the Rise of the State: The Military Foundations of Modern*

*Politics*(New York: The Free Press, 1994).

*Toitsu Chosen Shimbun*, June 27, 1970.

## An Impact of Marketization on Social Stratification in North Korea

Kim, Philo(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impact of marketization on social stratification in North Korea. Class structure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market system in North Korea had been reorganized based on the degree of sacrifice and suffering from the Korean War. Significant change in the social structure has been undergone over the past ten to fifteen years since the adoption of market system. Based on the survey of North Korean refugees, it is estimated that 70 to 80 percent of North Koreans are living relying on the market and around 10% is doing the business as a full time job, and it seems that the merchants including emerging capitalist has formed a new social class in North Korea. In spite of the limitation of privatization by law, the merchant class is growing with accumulation of the capital by exerting

license and operating rights from national authorities.

The emerging merchant class has generally maintained a symbiotic relationship with the state bureaucracy, but the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se classes are also growing as revealed in the recent currency reform. The recent measure of Kim Jong Eun regime to offer an opportunity of earning foreign currency to the families of the fallen soldiers and civilian victims from the Korean War shows that the existing class structure is being impacted by the growth of the market. And also, due to the expansion of external exchanges and openness, the change in class structure, especially in so-called complex class, is underway from the bottom of the society. All of these show that the existing hierarchical order which had been classified based upon the damage from the war has been seriously challenged by the recent market development. It seems that the crack and erosion in existing class structure is already underway as a result of marketization, although it did not develop into a serious dismantlement yet.

Keywords: social stratification, class structure, marketization, merchant class, emerging capitalist, *Sungboon* policy